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654호 2022. 5. 2.(월)

공포 · 발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2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37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5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6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91

회 람								
--------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전략과 (610-407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장, 의회사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u>보건소장, 의회사무과장</u>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보건소장</u> ----- ----- -----.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별표 1,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u>	제3조(위임사무) ①----- ----- ----- <u>별표 1</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무 정비(제1조, 제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제14조 중 “이 조례 제11조”를 “제11조”로, “예산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3. (생략) <u><신설></u>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 -----제3조제6호----- ----- -----.
제8조(위원의 해촉) <u>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생략)	제8조(위원의 해촉) <u>구청장</u> ----- ----- -----.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u>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u>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u>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u>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7항의 도시재생사업과 이 조례 제11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p>제14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u>이 조례 제11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u> 사업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u>예산 범위 내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u>2. 주민협의체</u> <u>3. 사업추진협의회</u> <u>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u> <u>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u></p> <p>제14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 ----- ----- <u>제11조</u>----- ----- -----<u>예산의 범위에서</u> -----.</p>
--	--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 승인 [지방규제혁신과-1936(2021.8.12)호]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유형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 및 범위 확대(제3조)
- 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제13조)
- 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 신설(제13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 용도 건물의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생협력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2. 상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또는 청년 창업자 등을 위한 우선 공급
3. 창업지원시설 등을 위한 공간
4. 주변 상권과 상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화된 업종 선정

제4조(상생협력상가 운영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가내몰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장
7.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생상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대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생상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 업무 관련 공무원
2.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
4.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단체 대표 및 주민
5.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상생상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상생상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의 수의계약·임대내용 및 위원회 운영 등 상생협력상가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상생협력상가 운영 도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제3조)
- 다. 상생협력상가 운영 방법 등(제4조)
- 라.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을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선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이 필요할 때에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의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예산사용 내역 등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의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특정 성별위원 수 제한, 존속기간 등(제2조)
-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제3조~4조)
- 라. 구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등(제5조)
- 마.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제6조)
- 바.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제7조)
- 사. 위원회 활동 결과 공개(제8조)
- 바. 운영세칙(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같은 항 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0원”을 “5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150원</u>	1.----- ----- <u>500원</u>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350원</u>	2.----- ----- <u>500원</u>
3.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500원</u>	3.----- ----- ----- <u>1,000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 등에 따른 납부신청의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된 부분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제7조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이하 “구민교육”이라 한다)이란 구민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민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모 및 보호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원 등
5.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민교육의 추진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구민교육 사업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구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구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교육 내용) 구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교육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구민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구민은 구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대상이 구민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참여 실적에 따라 보조금 산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구민에게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제3조~제4조)
- 다.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 라.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의 내용(제6조)
- 마.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사업의 위탁(제7조)
- 바. 재정지원, 참여보상 등(제8조~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생 략)	제5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u> <u>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 승인 [지방규제혁신과-1936(2021.8.12)회]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유형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용도 신설(제5조제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 용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 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재 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 지역 예상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 다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방지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또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과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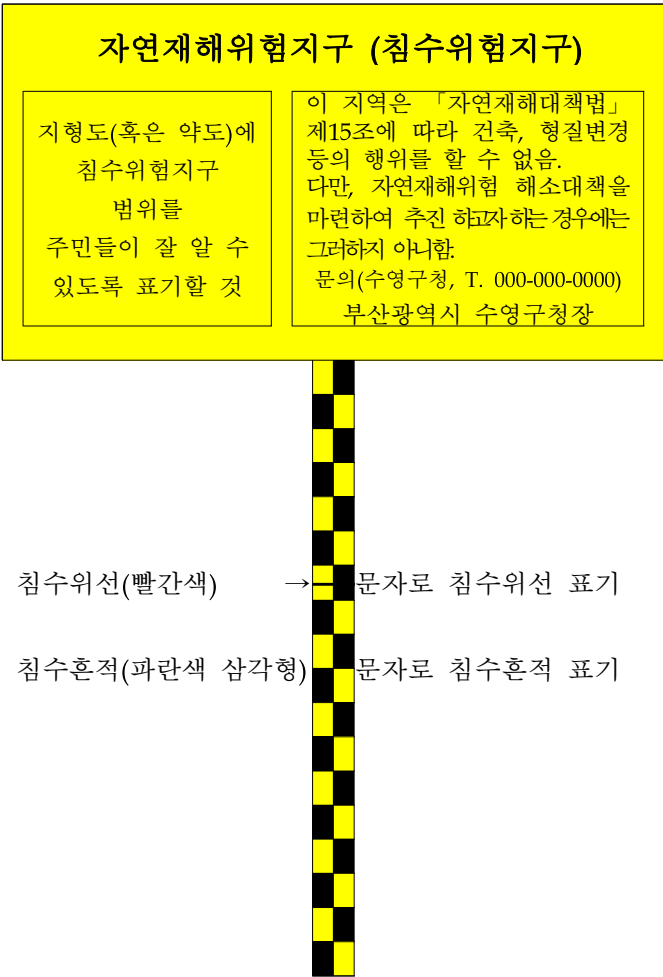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표지판 예시	표지판 설치 요령
 <p>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p>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p> <p>침수위선(빨간색) →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p> <p>침수흔적(파란색 삼각형) → 문자로 침수흔적 표기</p>	<p>○ 색 상: 표지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p> <p>○ 표지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p> <p>○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p> <p>▶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을 표시(예시 참조)</p> <p>▶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p> <p>○ 재질 : 표지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p> <p>○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간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 (예시 참조)</p> <p>○ 침수흔적 표기: 파란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 “나비”, 2005</p> <p>○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p> <p>○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p>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표지판 예시	표지판 설치 요령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의(수영구청, T. 000-0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p> </div> </div>	<p>○ 색 상 : 표지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노랑)</p> <p>○ 표지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p> <p>○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p> <p>▶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p> <p>○ 재 질 : 표지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p> <p>○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p> <p>○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p>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제1조~제3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등(제4조~제6조)

다.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제7조~제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 용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표시 신고의 경우에는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단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한”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의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 다.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및 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m^2 초과 2m^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m^2 초과 3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m^2 초과		80만원에 초과면적 0.5m^2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에 초과면적 0.5m^2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에 초과면적 0.5m^2 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m^2 초과 5m^2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m^2 초과 10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m^2 초과		80만원에 초과면적 1m^2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에 초과면적 1m^2 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에 초과면적 1m^2 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 까지 00장 배포

수영구청장

※ 참고사항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가능)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출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② (생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안,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 ----- ----- ----- ----- -----.
<u><후단 신설></u>	<u>전단의 표시 신고의 경우에는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단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u>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 <u>안전점검</u> ----- -----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 ①~④ (생략)	제28조(수수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3만원
- 0.5㎡ 미만		22만원
- 0.5㎡ 이상 0.8㎡ 미만		32만원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2만원
- 1.3㎡ 이상 1.6㎡ 미만		50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5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0만원
- 2.6㎡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8만원
- 0.5㎡ 미만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14만원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5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⑤-----
-----수수료-----
-----.

1.~3. (현행과 같음)

4.-----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의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p>라) 면적 1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p> <p>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4. 법 제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가. 1회 위반한 경우</p> <p>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42만원</p> <p>58만원</p> <p>75만원</p> <p>80만원</p> <p>15만원을 더한 금액</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42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법 제20조제1항제3</p> <p>1만원에</p> <p>1일제부터</p> <p>계산하여 1일마다</p> <p>3천원을 더한 금액</p> <p>10만원에</p> <p>31일제부터</p> <p>계산하여 1일마다</p> <p>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p> <p>91일제부터</p> <p>계산하여 1일마다</p> <p>2만원을 더한 금액</p> <p>법 제20조제1항 제2호</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법 제20조제1항 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법 제20조제2항</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p>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 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계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인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형광등을 켜고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판(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을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판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및 광고물의 종류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		80만원에 초과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에 초과면적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에 초과면적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		80만원에 초과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에 초과면적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에 초과면적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만원에 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70만원에 9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하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신 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 까지 00장 배포

수영구청장

※ 참고사항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출력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과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과제인 위원회 심의대상 합리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단신고 시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 개선(제3조, 별지 제2호의2서식)
- 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제28조)
- 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 용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본사 또는 생산·판매시설)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라.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계획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매실적의 작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등의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제8조에 따른 우선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교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의 수립(제4조)
-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의 작성(제5조)
-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6조)
- 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 바. 우선구매 예외(제8조)
- 사.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제9조~제11조)
- 아. 판로지원 사업(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 용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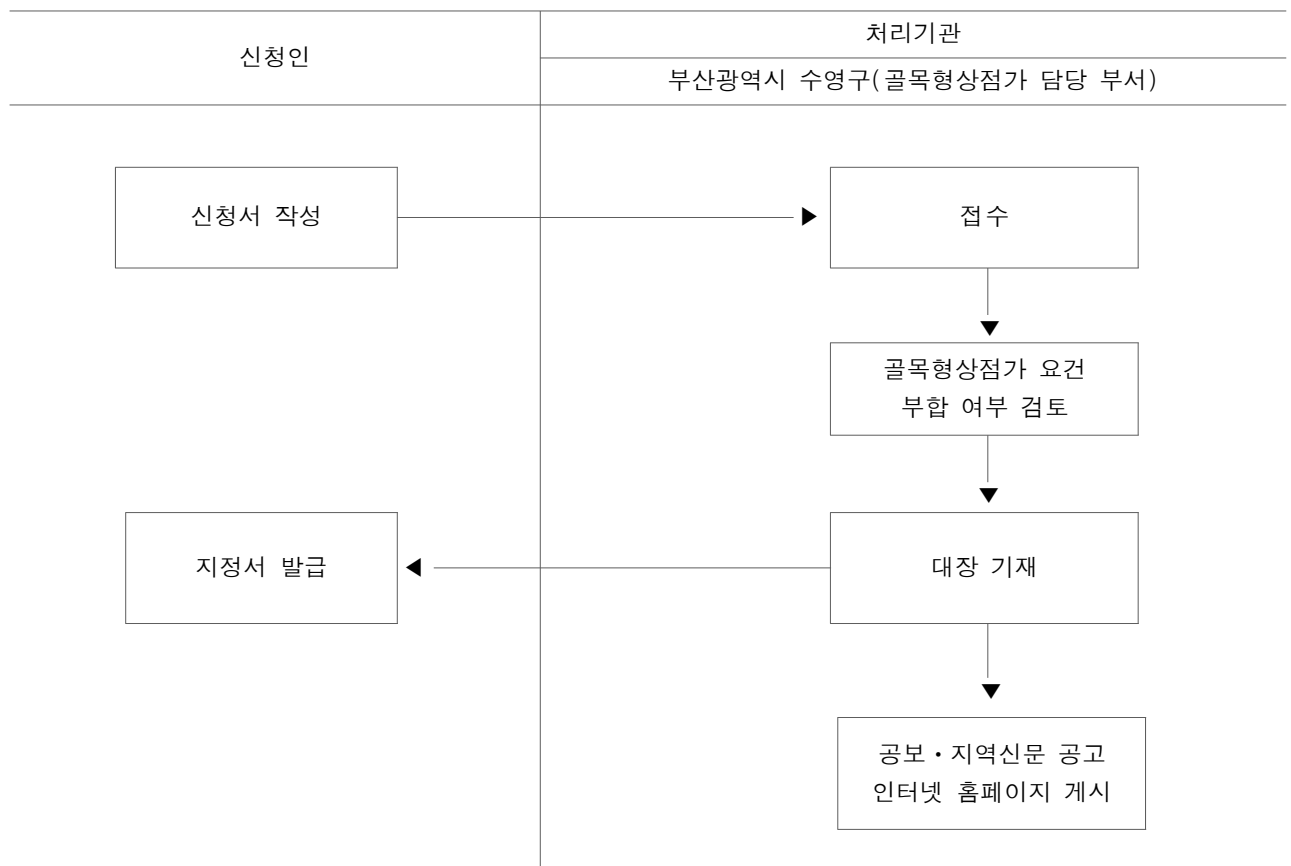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u>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u>)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 ----- ----- ----- ----. <단서 삭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u>	<삭제>
3. <u>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u>	<삭제>
4. <u>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포함)</u>	<삭제>
5. 6. 7 (생략)	5. 6. 7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 용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정·개정 및 폐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관부서”란 사무에 따라 보유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정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을 “입법”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주관과장은 입법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을 “(심사)”에서 “(심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제9조의 제목을 “(심사방법)”에서 “(심사)”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구성 등) 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전략과장이 된다.

② 심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기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을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과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로부터”를 “공포일부터”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이전”을 “시행 이전”으로, “통보등”을 “통보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2조, 제23조”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22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현행업무 추진 내용 등의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수시로 검토하여 적기에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치법규입안 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2)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 (2) 입법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마. 제명 및 개정자치법규의 표기방식

-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단, 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음)
- (2)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씀
- (3)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
- (4)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2. 조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 ⑧ 기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 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해석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음
- ② 띄어쓰기는 문법체제에 따라야 함
- ③ 법규용어의 통일
- ④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 ⑤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 ② 상위법령 위반 여부
- ③ 다른 조례와의 균형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

조례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개정 방식을 고려

(다)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2) 유의사항

(가) 기존 조례 중 한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그 조항을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 ① 삭제

②-----

③-----

(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제○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 신설하여야 한다. (가지번호 방식)

(다)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개정조례의 형식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가) 개정지시문의 표기방식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명개정의 경우: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해야 한다.

-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로 한다.

(다)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가지번호 방식)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제○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①-----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 중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5조 “○○”을 “△△”로 하여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④ 한 개의 호 내용을 전문 개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

(사) 조(항·호)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이므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나) 폐지조례는 폐지조례를 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다.

(2) 유의사항

-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 (가)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직권사항이다.
-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도 제정할 수 있다.
-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

(2) 규정사항

-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권에 따라 규정하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인 규칙 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 ③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
-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⑤ 의회 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 시 유의사항

- (가) 형식면 : 조례의 형식에 준한다.
- (나) 내용면
 -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 여부
 - ③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3)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4)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 제정의 경우와 같다.

다. 폐지의 경우

-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기타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입법이유서(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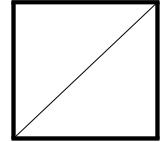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 . . . ~ . . .)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또는 붙임 참고)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작성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 5) 비용추계서 등: 비용추계서, ○○○ 등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안

제 출 자	○○○과장
제출연월일	. . .

기획전략과 심사를 마칩

[별지 제10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 일 자 : 20 . . .

☐ 안 건

1. 20 - 호, 안전명

2. 20 - 호, 안전명

3. 20 - 호, 안전명

4. 20 - 호, 안전명

☐ 의결내용

위 원		안전1에 대한 의견		안전2에 대한 의견		안전3에 대한 의견		안전4에 대한 의견		서 명
직	성 명	가	부	가	부	가	부	가	부	
의 장										
부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기타의견

[별지 제11호서식]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과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가.
- 나.
- 다.
- 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법」,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 . . ~ . .)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또는 붙임 참고)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작성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 작성
- 5) 비용추계서 등: 비용추계서, ○○○ 등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 규칙의 <u>제정·개정 및 폐지</u>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4. (생략) 5.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u>제정·개정 또는 폐지</u> ----- ----- ----.
제3조(적용범위) <u>자치법규와 행정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u>	제3조(적용범위) <u>입법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u>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u>주관 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② (생략)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u>주관 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 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주관과장은 입법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기획전략과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 예고) ① 주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전략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10. (생략)

② (생략)

제9조(심사방법) ①~③ (생략)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과 기획전략과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심사요청) ①-----

-----.

1.~5. (현행과 같음)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 ①~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13조(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전략

과장이 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다만, 상정할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15조(의안제출) ①~② (생략)

② 심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전략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제안설명) ① (생략)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생략)
② 기획전략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

--- 별지 제7호서식 -----

--.

제16조(제안설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기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 제55조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전략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 공포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야 하며,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포) ①~② (생략)

③ 기획전략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행정규칙의 입안·심사·정비 및 발령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2조,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과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제22조(공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포일부터-----

-----.

제23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시행 이전-----
-----통보 등-----
-----.

제25조(준용)-----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22조-----.

<p>제27조(자체 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u>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제26조제1항</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u> <u>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u> <u>이를 정비하여야 한다.</u></p>	<p>제27조(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상위법령 <u>제·개정 사항, 현행업무 추진 내용</u> <u>등의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u> <u>수시로 검토하여 적기에 정비하여야</u> <u>한다.</u></p>
--	---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법제 업무 운영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법제업무 추진 도모

◆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제6조, 제8조)
- 나. 조항 내용에 따른 조문의 제목 개정(제8조, 제9조)
- 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12조, 제19조제2항)
- 라.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분법에 따른 사무의 이관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 변경(제13조)
- 마. 현행 법제운영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4조, 제17조, 별표, 별지 서식)
-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제지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 용 주
권한대행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규 제1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① 구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직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의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구 소속 공직자가 법 제6조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7조(구청장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구 소속 공직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구의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구청장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의 상대방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퇴직자와 사적 접촉하려는 구 소속 공직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기록의 관리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구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구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구 소속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
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원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 3의 법 위반
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2	마을정비 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6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7	온천개발 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8	시장정비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 칸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① 담당 업무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업무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취득(예정)일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소재지	
	지번	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 1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제1조~제2조)
- 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조치 등(제3조~제4조)
- 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및 신고(제5조~제6조)
- 라. 구청장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 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 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제9조~제10조)
- 사.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및 기록의 관리(제11조~제12조)
- 아.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이첩·송부 등(제13조~제17조)
- 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및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제19조)
- 차.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21조)